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기본소득 찬반을 넘어서

금 만*

기본소득의 도입은 자산소유나 노동성과에 따른 현재의 소득분배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분배원리의 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효과는 좁은 의미의 소득분배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넓은 의미의 분배, 곧 소유권, 생산체제, 사회재생산, 근본적으로는 경제, 곧 사회적 시간의 재분배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심대한 변화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며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한다. 바로 여기에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과 기본소득론이 교차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둘의 만남은 마르크스의 현재화를 위해서든 기본소득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든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았다. 코뮌주의에 관한 매우 절제된 마르크스의 언급을 일종의 분배정의론으로 축소하는 시도, 투하 노동시간 척도의 소멸로부터 기본소득의 근거를 끌어내려는 시도, 수탈 개념에 입각하여 기본소득론에 정치경제학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시도,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시도는 마르크스와 기본소득의 만남에서 기록할 만한 사건이지만 명백한 제한성을 드러낸다. 대신에 이 글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외부인 ‘부의 생산’이 ‘가치생산’으로 내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은 수탈, 즉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의 재분배가 아니며 플랫폼 자본 주도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공통부의 가치화이다.

주요 용어: 플랫폼자본주의, 기본소득, 마르크스,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공통부의 가치화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geummin2013@gmail.com

1. 들어가며: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과 기본소득의 만남

이 글은 기본소득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마르크스가 남긴 지적 유산에 접속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러한 연결이 기본소득 입론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수의 기본소득론은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과 무관하게 제출되었으며 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대의 논쟁에서 굳이 마르크스가 소환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가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에 관한 논의 또는 대안적 사회형식으로의 이행 경로에 대한 탐색으로 확장되려면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과의 만남은 충분히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때로는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시 역사의 서고(書庫) 속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더 많은 부분에 의하여 기본소득론은 내적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르크스와 기본소득의 만남은 마르크스의 현재화를 위해서든 기본소득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든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를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에 접속시킨 세 가지 사례를 논의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판 더 벤과 판 파레이스의 논문 『코뮤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이다(Van der Veen and Parijs, 1986). 마르크스가 코뮤주의의 고차 단계의 분배원리로 제시한 ‘필요에 따른 분배’와 관련된 개념적 혼동을 떠나서도 이 논문은 오직 분배정의 차원으로 협소화된 코뮤주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본소득의 도입 조건으로서 현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게 만드며, 코뮤주의로의 이행을 기본소득의 전면화와 등치시킨다.

두 번째 사례는 기본소득의 근거를 비물질노동의 등장으로 투하노동시간이 더 이상 가치척도로 기능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찾으려는 하트와 네그리 및 포스트오페라이스트(postoperaist)들의 시도이다(Hardt and Negri, 2001: 285~286; 2004: 107~109; Vercellone, 2010: 238~239).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가 가치척도를 투하노동시간에서 찾았다고 보는 전통적 이해를 전제하고 비물질노동의 등장과 가치척도의 소멸론을 전개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새로운 독해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Backhaus, 1997; Heinrich, 1991; Engster, 2014). 개별적 노동이 등질화되어 오직 시간적 길이로 비교되는 포드주의적 공장생산은 투하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는 가상

을 만들었을 뿐이다.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포디즘인가 포스트포디즘인가 아니면 인지자본주의인가의 문제 틀을 넘어 이념적 평균으로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관한 서술적 비판이며, 노동가치론의 화폐론적 전회(monetary turn)의 핵심은 자연적 척도와 사회적 척도의 구별이다. 상품가치의 측정은 자연적 척도에 따른 측정이 아니라 사회적 측정이며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측정에서 척도는 측정과정(교환과정)의 외부에 자연량투하된 노동시간량으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측정과 더불어 발생한다(Engster and Schröder, 2014; Engster 2014; Postone, 1993).

포스트오페라이스트의 사례는 기본소득과 마르크스의 만남이 마르크스에 대한 상이한 독해 문제를 우회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예컨대 피츠(Pitts, 2018a; 2018b)는 독일 학자들의 ‘새로운 독해’(Backhaus, 1997; Heinrich, 1991)에 의지하여 기본소득론을 비판한다. 물론 그가 비판하고 있는 기본소득론은 모든 종류의 기본소득론이 아니라 네그리아와 포스트오페라이스트들의 측정불가능성 테제 및 부분적으로 이와 연결된 폴 메이슨(Mason, 2015)의 탈자본주의론에 등장하는 기본소득론이다. 문제는 피츠의 비판이 기본소득론이란 측정불가능성 테제와 같은 잘못된 마르크스 해석 위에 서 있다는 비판으로 일반화된다는 점이다. 이와 정반대 입장은 칼 라이터(Reitter, 2015; Hanloser and Reitter, 2008)의 기본소득론이다. 라이터는 ‘새로운 독해’를 거칠게 비판하며 이는 그의 철학적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기본소득론을 펼친다. 이러한 논쟁 상황은 언뜻 보면 매우 역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한 마르크스 독해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도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새로운 독해’에 의지하여 이해하면서도 피츠와는 정반대로 마르크스의 가치비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유효한 이행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빅데이터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드러나는 포스트오페라이스트 이론들의 한계를 밝히고 기본소득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즉 포스트오페라이스트들은 데이터를 사회적 노동으로 환원하고 데이터를 고정자본으로 만드는 사회적 기술적 형식을 도외시한다. 이는 빅데이터 자본주의에 대

한 형태분석 대신에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을 사회적 노동이라는 실체로 환원하는 새로운 종류의 실체주의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포스트오페라리스트의 데이터 가치론은 마르크스 가치론에 대한 잘못된 독해에 근거하여 노동 시간 척도의 소멸이라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가치척도의 소멸이라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개념이 비물질 노동 또는 사회적 노동이다. 노동 개념은 확장되었고 가치 개념은 폐기되었지만 사회적 부의 원천을 여전히 확대된 노동 개념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포스트오페라리스트 이론은 투하 노동가치설에 의존했던 20세기의 전통적 마르크스리즘과 마찬가지로 실체주의적이다.

지금까지 마르크스와 기본소득론의 만남에서 가장 유의미한 기록은 마르크스 지대론의 재구성에 의거하여 기본소득론과 수탈론을 접속시킨 시도이다. 특히 광노완(2017a; 2011; 2010)은 마르크스 독해를 통해 도시지대론과 수탈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펼쳤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원천을 공유부의 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지대와 도시지대에서 찾으며, 이를 통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하자는 기본소득 요구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방식의 접목은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통부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본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기본소득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어떤 측면이 폐기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원천에 대한 질문은 기본소득이 왜 개혁대안 또는 이행수단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토지지대나 이자 등 금융수익에 적용할 수 있는 수탈론을 빅데이터 자본주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플랫폼 자본은 생산자본의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을 통해 가치생산에 참여한다. 플랫폼 자본의 가치생산은 빅데이터 공통부의 가치화로서, 즉 부의 영역을 상품화함으로써 가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전체 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플랫폼 자본은 단순히 기생적이지 않으며 이윤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적이다. 디지털 공통부의 가치화는 단순한 빼앗김의 관계가 아니라 가치생산과 박탈이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이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원시적 축적이 원래 존

채하던 토지공유지를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유지 농민을 분해시켜 프롤레타리아트를 창출한 과정이라면, 플랫폼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빅데이터 인클로저에서 빅데이터는 인클로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인클로저와 함께 생산된다. 원시적 축적이 산업자본주의의 노동자계급을 형성할 인구학적 저수지가 되었다면, 거꾸로 빅데이터 인클로저는 자동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분해하여 노동계약 외부의 존재인 플랫폼 노동을 확대한다. 이러한 차이는 빅데이터가 자연적 공통부인 토지와 달리 인공적 공통부로서 원래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가치화 과정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다. 즉 빅데이터의 가치화 과정은 빅데이터 공통부를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통부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본소득을 공통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인 평등배당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가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과 어떻게 접속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러한 탐색은 위에서 서술한 세 번의 만남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2절에서 『코뮌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로부터 이어지는 논의방식의 제한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포스트오페라리스트들과 및 광노완의 기본소득 논의는 판 더 벤과 판 파레이스의 논문과 달리 규범적 논의를 넘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접속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절에서는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두 사례의 한계에 대해서 각각 따져볼 것이다.

2. 기본소득론은 기본필요의 윤리학인가?

현대적 기본소득 논의를 점화했다고 평가받는 판 더 벤과 판 파레이스의 논문 『코뮌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1986)은 “무조건적 보조금”(unconditional grant), 곧 기본소득을 『고타강령비판』(Kritik des Gothaer Programms)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코뮌주의의 고차 단계의 “필요에 따른 분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논문은 기본소득을 단지 기본필요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이며 기본소득의 원천에 대해 묻지 않는다. 저자

들은 공공부조, 기본소득, 고차 단계의 코뮌주의를 모두 ‘필요의 원리’의 발전으로 이해하여 질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상이한 필요 개념을 혼동한다(금민, 2020: 117~118).¹⁾ 하지만 ‘필요의 원리’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식의 분배원리를 통칭하는 유적 개념이 아니다. 즉 20세기 복지국가의 공공부조는 ‘필요의 원리’에 입각하지만 여기에서 ‘필요’(needs)란 베버리지(Beveridge, 1942)가 결핍(want)라고 불렀던 것이지 『고타강령비판』에서 공산주의 높은 단계의 분배원리로 제시된 ‘필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일뿐더러, 기본소득은 어떤 종류의 ‘필요의 원리’와도 무관하며 오직 보편적 공유자 자격에 입각한 공통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평등배당일 뿐이다.

『고타강령비판』에 등장하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러한 분배원칙이 관철되는 코뮌주의의 높은 단계에 대해 마르크스는 생산력 수준이 매우 높아서 굳이 성과에 따른 분배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상이한 필요에 따른 자율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태는 희소성의 경제가 종식되고 풍요의 경제가 시작된 상태로서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넘치고 난 후”에 도래한다(Marx, 1875 (MEW 19): 211).²⁾ 이는 “필연의 왕국”을 넘어 “자유의 왕국”으로 이행함에서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근본조건”이라고 말하는 『자본』 3권의 구절을 연상시킨다(MEW 25: 828). “필연의 왕국”에서 인간은 여전히 “물질적 생산의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자유의 왕국”에서는 “인간능력의 발전이 자기목적이 된다”(MEW 25: 828). 코뮌주의의 낮은 단계의 분배원칙인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는 이러한 발전상태에서 불필요해진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굳이 사회적 부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배당할 이유도 사라진다. 코뮌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는 무조건적 보편적,

1) 광노완(2007: 206)도 기본소득을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로 분류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선별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의 차이도 그저 ‘필요의 원리’가 보편화되었는가 또는 특정한 타깃 그룹에 한정되는가의 차이로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필요의 원리’가 구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게 된다.

2) 이하부터 Marx가 1875년, 1894년에 집필한 책은 MEW의 도서 번호와 페이지만 적시한다.

개별적 평등배당이라는 분배방식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완전 자동화된 러셔리 코뮌주의”(Bastani, 2019)에서는 각자의 필요를 각자가 평가하는 자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본소득은 불필요해진다. 이러한 상태를 표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질적 재화생산은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디지털 재화의 경우에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기본소득 방식으로 평등 할당될 이유가 전혀 없어서 개별적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배된다. 이를 단지 유평타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도달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선부른 일이다. 다만 문제는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형식적 제약이다. 즉 자본주의는 경쟁에 의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술진보가 정체되며, 지적재산권 체제에 의하여 확산이 가로막히며, 무엇보다 혁신의 방향이 굴절되고, 그 과정에서 생태적 위기는 곧장 재앙으로 변한다는 점이다(Williams and Srnicek, 2013). 반면에 기본소득은 더 많은 자동화 및 지식생산성 증대의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적 제약을 넘어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며 코뮌주의로 나아가는 탈자본주의적 전환을 앞당긴다(Srnicek and Williams, 2016: chap. 5).

하지만 판 더 벤과 판 파레이스는 이와 같은 피드백 고리에 주목하는 대신에 기본소득을 높은 단계의 코뮌주의의 ‘필요에 따른 분배’와 등치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한편으로 코뮌주의는 탈희소성의 경제가 아니라 ‘필요의 원리’와 같은 규범적 분배원리로 축소되며,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코뮌주의와 등치되어 이행의 목표가 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이행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의미는 사라진다. 『코뮌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은 기본소득의 가능성 조건, 곧 자본주의 변화와 위기구조에 대한 분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 분석이 사라진 자리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를 중심으로 한 분배정 의론이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성의 발전이 경제가 코뮌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을 기계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Van der Veen and Parijs, 1986: 13).

『코뮌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이 수행한 마르크스 접속에 대한 문제점

은 단지 개념적 혼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점은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과 기본소득론의 교차점이 분배정의론의 차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를 굳이 경제주의적 환원론자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본』(Das Kapital)의 저자가 다룬 대상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정의(justice)인가 부정의인가의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형식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 것만은 사실이다. 『자본』 3권에서 마르크스는 “자연적 정의(Gerechtigkeit)에 대해 떠드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단언한다. 마르크스에 따르자면 법률적 합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조응하는 한 정의롭고 노예제나 상품 품질에 대한 사기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정의하다(Marx, 1894; MEW 25: 351~352). 이는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용만을 임금을 통해 분배받으며, 생산된 잉여가치는 모두 생산수단 소유자인 자본가가 전유하는 현 상태에 대해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말로 확장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노동력의 상품화와 자본주의적 착취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가치대상성에는 자연소재가 티끌만치도 들어있지 않으며”(MEW 23: 6), 가치형식(Wertform)이나 자본주의도 자연법칙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서 “역사적으로 잠정적인 성격”(MEW 25: 885)을 지닐 뿐이다. 다시 주어진 주제로 돌아가자.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분배정의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접점은 이윤이나 착취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범주들의 규범화로부터 얻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경제학적 범주들은 자본주의인 한에서 정의를 표현하며, 그러한 한에서 정의나 부정의와 같은 규범적 범주들은 이로부터 재구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도들이 설혹 실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경제학 비판의 심층적 차원에 닿지 못한다.³⁾ 심층적 차원에서의 규범 범주는 상품형식(Warenform)과 사유형식(Denkform)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만 얻어질 것이다.⁴⁾ 착취인가 정

3) 1980년대 분석 마르크스주의의 지평에서는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재구성하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등장했지만 그 실천적 호소력과 무관하게 심층적 차원에서 가치형식과 사유형식의 관계를 건드리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윤리의 관계에 관한 이 시기의 주요 연구물들은 다음을 보라: Cohen, Nagel and Scanlon(eds.), 1980.

의인가의 문제들은 마르크스를 단순화한다. 마르크스에 따르자면 생산수단 소유자의 잉여가치 전유는 착취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정의이다. 물론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 비용에 못 미치는 임금도 자본주의에서도 부정적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방법론적 핵심인 사회형식의 규정성은 자본주의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단순하고 명증하게 전개함에 제약이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사회형식의 외부로부터 규범적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즉 ‘가치의 영역’인 정치경제학적 범주에 대하여 외부적인 ‘부의 영역’으로부터 규범적 원리를 끌어내는 것이다. 『고타강령비판』의 서두에서 마르크스는 라살레(Ferdinand Lassalle)를 비판하면서 노동은 가치의 원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의 원천은 아니다”라고 말한다.⁵⁾ 부는 노동만이 아니라 토지, 자연자원, 지식과 전승된 기술에도 의존하고 있으며(Howard, 2005b: 116), 이는 마땅히 모두의 부, 곧 공통부 또는 공유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공통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곧 기본소득으로서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노동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Howard, 2005a: 128~129).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원칙이 관철되는 코뮌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모든 부가 오로지 노동을 원천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노동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대되므로 마르크스가 말한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Howard, 2005a: 129~134; 광노완, 2017b). 이러한 접근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범주들의 외부에서 분배정의의 규범적 원칙들을

-
- 4) 『자본』 1권에서 마르크스는 ‘자유’, ‘평등’, ‘소유’와 같은 규범 개념이 상품교환과 임금노동관계의 사유형식임을 밝힌다(MEW 23: 189~190). “유통 또는 상품교환의 영역”은 “천부인권의 진정한 예텐”이라는 마르크스의 언급(MEW 23: 189)은 정치경제학적 범주들과 규범적 범주들이 대응관계에 놓임을 말해준다. 알프레드 존-레텔(John-Rethel, 1978)은 가치형태론을 실제적 교환과정을 중심으로 독해했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치형식과 사유형식의 상동성에 대한 탐색을 최초로 수행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엥스터와 슈라우트(Frank Engster and Oliver Schlaudt, 2018)의 해설 및 엥스터와 슈뢰더(Engster and Schröder, 2020)의 비판적 재구성을 보라.
- 5) 『자본』 1권에서도 마르크스는 “노동은 생산된 사용가치, 곧 소재적인 부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윌리엄 페티가 말했듯이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며 지구는 부의 어머니”(MEW 23: 58)라고 말한다.

이끌어낸다. 따라서 이는 이러한 정의원칙들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며 자본주의 경제로 내부화하는 정치경제학적 범주들의 운동을 해명하는 후속 작업과 연결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콰노완(2017b)은 그와 같은 후속 작업을 수행한다. 물론 판 파레이스(Van Parijs, 2008)도 외부자원의 평등 문제를 논한다. 그는 드워킨(Dworkin, 2000)의 외부자원의 평등한 소유 원칙은 받아들이는 한편 노동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외부자원을 분배하자는 드워킨의 주장에는 반대하며 그 대신에 외부자원의 평등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지를 논한다. 그럼에도 외부자원의 평등한 소유가 기본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사회형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공통부란 법률적 소유형태와 무관하게 원래는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 곧 토지나 자연환경과 같은 자연적 공통부와 누구의 성과나 기여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 곧 외부효과에 의한 인공적 공통부의 두 종류를 모두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통부 개념에는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평등배당이라는 분배원리를 함축되어 있다. 토지, 자연자원, 지식, 빅데이터와 같은 공통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간주하면 이러한 수익의 분배방식은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평등배당일 수밖에 없으며 조건을 달고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게 된다. 공통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포착하면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노동성과에 따라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라는 매우 간명한 분배정의 원칙을 얻게 된다. 기본소득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즉 조세형이든 공동소유형(Lansley, McCann and Schifferes, 2018; Lansley and McCann, 2019)이든 또는 사기업 지분의 일부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권 모델(Meade, 1989)이든 기본소득의 원천은 언제나 공통부이다. 여기까지 공통부의 분배로서 기본소득 논의는 일차적으로 분배정의론의 차원에 머문다. 이제 이러한 분배정의론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만나기 위해서는 공통부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전유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형태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콰노완(2017; 2011; 2010)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지대론과 수탈 범주에서 답을 찾는다. 다음 3절에서는 이와 조금 다른 대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 판 더 벤과 판 파레이스가 『코문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에서 시도한 마르크스와의 접속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저자

들이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주의에서 곧바로 코뮌주의의 높은 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기본필요의 충족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물론 완전기본소득은 기본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기본소득을 공통부의 분배로 이해하는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은 기본필요의 절대량이 아니라 생산된 공통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공통부의 크기는 이미 기본필요를 충족하는 정도로 늘어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공통부를 원천으로 강조하는 개념적 재정외에 의해서도 기본소득의 충분성 기준이 흔들릴 위험은 전혀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을 기본필요의 절대량으로 치환한 순간 기본소득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치게 된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할 몫이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며,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공통부의 자본주의적 생산, 즉 자본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부의 경제를 가치의 경제로 내부화함으로써 이윤을 생산하는가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도록 만든다. 기본소득론을 기본필요의 윤리학, 기본필요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분배정의론으로 보는 판 파레이스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자본주의나 자동화가 같은 주제는 기본소득론을 어지럽게 할 뿐이다.

3. 빅데이터 공통부와 기본소득

데이터의 중요성은 단지 ICT 기업들에게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OECD는 이미 2014년에 제조업, 금융, 농업, 공공분야 등 산업의 전 부문과 사회 전체에 걸쳐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다(OECD, 2014).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데이터의 중심성(the centrality of data)이며 이 점에서 충분히 빅데이터 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며 빅데이터로 형성되어 이윤창출에 기여한다. 데이터 추출기구로서 플랫폼의 중심적 기능은 빅데이터 자본주의를 플랫폼자본주의로

고쳐 부를 수 있게 해준다. 플랫폼 자본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심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빅데이터 자본주의로 부르든 플랫폼자본주의로 부르든,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인공지능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사태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하나의 사태가 세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이 세 가지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플랫폼 없이는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다. 또한 빅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금민, 2020: 162). 기계학습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없이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발전할 수 없지만 플랫폼 알고리즘이 없다면 빅데이터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하나의 과정 속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상호 구성적이다. 따라서 가치창출에 빅데이터가 결정적인가 알고리즘이 결정적인가라는 질문은 마치 알고리즘을 데이터와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

미국 330개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Brynjolfsson et al., 2011)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을 채택한 기업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5~6% 높았다. 영국의 500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은 8~13% 정도로 높았다(Bakhshi et al., 2014). 이들 기업의 높은 이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폭스(Fuchs, 2019: 60)에 따르면, 2015년 미국 GDP에서 노동소득 비중은 53.1%였지만, 페이스북의 총수입에 대한 임금비중은 11.0%에 불과했다. 그런데 페이스북 노동자의 초봉은 연봉 14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페이스북이 미국 평균인 53.1%까지 지불해야 하는 임금소득 비중을 줄이는 일종의 절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방식으로 이윤을 증가시켰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높은 수익률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처럼 기술혁신의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잉여가치를 수탈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플랫폼 기업의 이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질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광고플랫폼을 플랫폼 자본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광고수수료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수수

료에서 이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플랫폼 자본의 이윤은 다른 기업의 이윤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양면 시장을 형성하고 하나의 시장의 비용을 다른 하나의 시장에 전가하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에 의해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얻는다(Rochet and Tirole, 2006)는 점으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차 네트워크 외부효과도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고 데이터의 집적이 많아지면 이윤이 더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윤의 증가는 더 많은 데이터에 의하여 가능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윤원천을 데이터로 볼 수도 있다. 아울러 광고 플랫폼은 플랫폼자본주의 미래를 보여주는 유형이 아니며 AWS나 Salesforce처럼 디지털 비즈니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임대하는 클라우드 플랫폼(cloud platform), GE나 지멘스(Siemens)처럼 전통적 제조를 인터넷 연결 프로세스로 변환하여 생산비용을 낮춰주며 제품을 서비스로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주는 산업플랫폼(industrial platform)이 플랫폼자본주의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rnicek, 2017a: 50~88; 2017b). 이와 같은 유형에서 이윤의 원천은 빅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이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둘 다 고정자본으로 가능하다. 이 글은 플랫폼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고정자본으로 보아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빅데이터에 의한 가치생산에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형대적 규정성이 제대로 포착된다는 점을 소상히 밝힐 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내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격차는 종종 지拂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이 문제를 정교하게 파헤치는 폭스(Fuchs, 2019)도 노동소득분배율의 현격한 차이를 포스트오페라이스트가 주장하는 ‘사회적 노동’의 실재성의 증거로서 이해한다. 하지만 ‘사회적 노동 패러다임’은 빅데이터가 고정자본화된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는 점, 빅데이터 고정자본에 의한 가치생산이라는 기묘한 현실은 그 대신에 빅데이터 공동부의 가치화에 대한 분석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이다. 플랫폼-빅데이터-인공지능 자본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를 단순히 생산물에 이전시킬 뿐인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이 아니라 스스로 잉여가치를 낳는 고정자본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만 빅데이터는 사회적 노동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엄연히 기업의 고정자본이라면, 사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고정자본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디지털 플랫폼에 의하여 수행되는 가치화 과정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한 후, 플랫폼 자본의 기생성과 생산성의 문제를 따진다.

1) 빅데이터에 의한 이윤생산: 가치화 과정의 비밀

데이터는 곧잘 원유(Srnicek, 2017a: 40; Haskel and Westlake, 2017)에 비유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천연자원에 비유하는 것은 비임금노동(unwaged labor)을 전유하는 자본의 작동을 은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항우, 2014). 천연자원의 비유는 데이터를 자본이 무상으로 전유하는 자유재로 간주하는 관점을 은연중에 전제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원유로서의 데이터라는 비유야말로 자본이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활용하는 현 상태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천연원료로서 데이터라는 비유는 플랫폼자본주의의 현실에 적합하다. 데이터의 수집, 빅데이터의 형성, 이윤창출을 위한 활용의 전 과정에서 플랫폼 알고리즘은 마르크스가 『기계에 관한 단상』(Maschinenfragment)에서 말한 ‘고정자본으로서의 일반지성’(Marx, 1983[1857~1858]: 590~609)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고정자본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일반적 과학, 즉 지식은 직접적 생산력이 되고, 따라서 사회적 삶의 과정의 조건 그 자체는 일반지성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며, 일반지성과 일치하게끔 변환된다.

물론 마르크스의 관점에 대해 플랫폼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 있는 노동으로서 대중지성(분산지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비판(Virno, 2007; Vercellone, 2007; Hardt and Negri, 2004)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는 데이터는 살아 있는 노동이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 노동은 임금노동만이 아니며 비임금노동을 포함한 활동 일반을 뜻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그것은 개별적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공장과 기업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된 노동, 나아가 인간주체와 비인간주체를 가를 수 없는 잠재적인 힘이라는 것이다(Lazzarato, 2014: 43). 언뜻 보기에 이와 같이 확장된 노동 개념

은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에서 데이터의 중심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윤곽을 부여하는 듯하다. 즉 데이터 및 플랫폼 알고리즘은 상품에 가치를 이전할 뿐인 고정자본이 아니고 부단히 갱신되는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원천은 사회적 노동에 놓여 있다는 관점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해방식에는 매우 중요한 혼동이 깔려 있다. 빅데이터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은 사회적 노동으로의 환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명을 필요로 한다.

(1) 데이터의 사회적 존재형식은 디지털 기록물

데이터는 디지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활동의 기록물일 뿐이다(금민, 2020: 160). 오늘날의 경제에서 거의 모든 활동은 디지털화되어 기록된다. 그런데 디지털 활동은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데이터의 원천일 뿐이다. 데이터로 기록되는 디지털 활동은 비물질 노동이나 정동(affect)만이 아니며 전통적인 생산노동도 디지털 기록으로 쌓여간다.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물리적 과정도 디지털 기록물로 남는다. 데이터는 디지털 기록물의 형태로 특정한 서버에 보관된다. 바로 이러한 물질성 때문에 데이터는 플랫폼 자본의 저장소(silo)에 보관되고 배타적으로 활용된다. 디지털 기록물로서의 존재형식에서 데이터는 지식이나 정보와 구별된다. 지식도 기록되어야 전송되겠지만, 기록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식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지식내용이겠지만, 데이터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디지털 기록물이라는 물질적 형식을 취하는가에 놓여 있다. 지식과 마찬가지로 정보도 특정한 기록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물질적 기록형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적 개념이다.

데이터는 디지털 기록물이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기록형태와 상관없는 개념이다. 이 점으로부터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와 지식은 개념적으로 구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기록물로서의 데이터는 비유가 아니라 데이터의 기술적 사회적 존재형식이라는 점이다.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은 디지털 기록물로서 데이터의 물질성을 간과한다. 활동과 기록 간의 존재적 간극을 무시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데이터의 사회적 존재형태를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는 것이다. 데이터는 플랫폼에 의해 수집되고 서버에 저장되는 디지털 기록물이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에 의해 율타리 쳐진다. 데이터의 물질성은 플랫폼 회사가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기술적 과정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데이터 인클로저는 기록물로서 데이터라는 물질적 존재형태에 뿌리를 둔다. 기록물이라는 성격은 데이터가 언제든지 고정자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디지털 서버에 기록된다는 것은 플랫폼 자본에 의한 데이터 인클로저를 자연적이며 어쩔 수 없는 기술필연성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는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디지털 회사에 있다고 오해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깨는 작업도 데이터의 물질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살아 있는 활동과 기록물로서의 데이터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히려 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공허한 환원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기록물이라는 점, 곧 데이터의 사회적 기술적 형태규정에서 출발할 때에만 빅데이터의 형성에서 디지털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어떤 근거로 기본소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짚을 수 있다.

(2) 빅데이터는 끊임없이 갱신되는 기록물

데이터는 디지털 기록물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본의 서버에 저장되고 고정자본이 된다. 그런데 데이터 고정자본이라는 개념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데이터가 산업기계처럼 상당히 긴 갱신주기를 가지고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민, 2020: 162). 아울러 디지털 기록물이라는 존재형식을 인쇄물처럼 정지된 형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과거의 산업기계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교체되어 갔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데이터도 실시간 업그레이드된다. 빅데이터는 흐름으로서의 기록물, 실생활세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기록물이다. 갱신되는 기록형태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플랫폼 알고리즘도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빅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빅데이터이든 플랫폼 알고리즘이든 사회적 존재형태는 고정자본이지만 과거의 산업기계와 달리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유에서 데이터를 사회적 노동이라는 가체실체에 환원시킬 이유는 없다. 가치화를 수행하는 측은 디지털 자본이며 여기에서 빅데이터는 해양이나 원시림처럼 가치화되기 이전의 자연적 부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 앞서 살폈듯이, 천연자원으로서의 데이터라는 비유는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천연자원의 비유를 쓰더라도 자본의 무상활용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천연자원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빅데이터를 공통부로 본다면, 무상활용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치화 이전에 빅데이터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층적 분석을 요한다. 자연적 공통부인 토지와 달리 빅데이터는 인공적 공통부이다. 플랫폼 자본이 빅데이터를 형성하여 고정자본화하는데, 바로 이 빅데이터 고정자본이 이윤을 생산한다. 이 과정의 비밀은 빅데이터 가치화 과정의 분석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3) 가치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별 데이터와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개별 데이터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빅데이터는 개별화될 수 없으며 개별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기에 개별적 디지털 활동에 귀속시킬 수도 없다. 가치원천은 개별 데이터들이 아니라 빅데이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별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현격한 가치차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수집한 개별 데이터에 대한 가치할당을 무의미하게 만든다.⁶⁾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는 끊임없이 갱신되며 개별 데이터가 수집되는 흐름을 떠나서는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빅데이터에 의한 가치생산은

6) 웹-브라우징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의해 개인식별가능정보(PII)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페인인 168명의 개인식별가능정보(PII)의 가치를 제2가격 역경매(reverse second price auction) 방식으로 측정한 어떤 연구(Carrascal et. al., 2013)에 따르면 오프라인 정체성에 관한 PII(연령, 성별, 주소, 경제상태)의 가치는 €25, 단순 검색정보는 €2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PII가 인터넷 무료서비스와 교환되는 것보다는 금전적 보상이나 서비스 개선과 교환되는 것을 선호했지만 PII의 가치가 혈값이라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는 웹-브라우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데이터에 대한 마이크로페이먼트를 도입해도 보상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에 의존한다. 잉여가치 생산이 개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빅데이터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흐름에 의존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개별 데이터들의 지속적인 수집이 없다면 가치생산의 흐름은 중단된다.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이 점을 중시하지만 개별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디지털 활동에 환원시킨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디지털 기록물로서의 데이터와 기록되는 대상으로서의 디지털 활동은 사회적 존재형식을 달리 한다. 전자는 플랫폼 서버에 기록되어 인클로저 되지만 후자는 서버 외부에 있어야만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이다. 빅데이터의 생산성이 개별 데이터들의 흐름에 의존한다는 점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기업의 고정자본인 빅데이터를 생성과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구의 성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회적 공통부로서 사회 전체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고 무단히 갱신되어 가는 2차적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자본은 빅데이터 고정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개별 데이터들을 가치생산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며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만들어내고 이윤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데이터에 대한 인클로저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줄 기술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장치는 바로 데이터 추출기구인 플랫폼이다.

(4) 빅데이터의 생산과 가치화 과정

데이터 없이는 플랫폼 알고리즘도 개발되지 않겠지만, 플랫폼 알고리즘이 없다면 빅데이터도 형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빅데이터는 오직 알고리즘과 결합함으로써만 경제적 가치를 낳는다. 이는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가치생산의 결과물을 알고리즘 개발자인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관념으로 이어진다. 마치 주인 없는 천연자원의 채굴자가 채굴된 자원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듯이 빅데이터에 의해 창출된 가치는 기업이 가져간다. 이러한 수익독점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빅데이터란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천 데이터의 집합 없이는 빅데이터란 애당초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며 플랫폼을 통해 개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흐름 없이는 가치 생산이 제약될 것이라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빅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의 고정자본이다. 그런데 빅데이터 고정자본은 단순히 빅데이터 형성에 투하된 가치를 최종생산물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직접적으로 잉여가치생산에 기여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한다. 즉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치생산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일시적 형태인 특별잉여가치 생산인지 또는 마르크스가 『자본』 3권 지대론에서 전개한 차액지대 I형태(Differential rente I)와 유사한 어떤 것인지,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범주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태에 대한 유용한 설명 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요한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서술 이전에 고정자본으로서의 빅데이터라는 관점은 마르크스의 『기계에 관한 단상』에 의거하여 플랫폼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반면에 포스트오페라리스트 이론들은 빅데이터를 아예 고정자본이 아니라 다중지성 또는 분산지성으로 본다. 이는 사회적 노동에 의해 생산된 공유자산의 지대화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게 만든다. 가치척도의 소멸과 함께 임금, 이윤, 지대로의 자본주의적 소득분배는 이미 무너졌으며 금융, 지식, 부동산 등 모든 영역에서 지대가 출현하여 적대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다고 본다 (Pasquinelli, 2008: 94). 베르셀론(Vercellone, 2010)은 인지적 울타리치기(cognitive enclosure)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지대를 희소성의 원리와 연결시킨다. 하지만 인위적 희소화 테제로 플랫폼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디지털 전환의 제1단계라고 볼 수 있는 1990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콘텐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여 인위적으로 지식을 희소제로 만드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와 달리 2008년 이후 디지털 전환의 제2단계에서 급격히 성장하게 된 플랫폼 기업들은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수익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올린다. 알고리즘이 판매나 대여의 대상인 경우에도 그것은 고정적인 콘텐츠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에 의하여 끊임없이 똑똑해지는 플랫폼 알고리즘이다. 울타리치기는 인지의 희소화 전략이 아니라 데이터 추출기구인 플랫폼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울타리 쳐지는 대상은 지식 또는 인지가 아니라 디지털 기록물인 데이터일 뿐

이다. 포스트오페라리스트 지대론은 플랫폼 자본의 이윤을 빅데이터 공통부의 빼앗김으로만 설명할 뿐이다. 여기에서 가치생산의 측면은 도외시된다. 그런데 이윤원천인 빅데이터란 애당초 플랫폼 없이는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플랫폼 자본은 빅데이터 공통부를 생산하지만 플랫폼 소유권에 입각하여 빅데이터를 고정자본화하고 초과이윤을 전유한다. 즉 공통부의 생산과 가치화는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인 것이다. 빅데이터 공통부처럼 애당초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을 빼앗기려면 그것의 생산도 빼앗김의 과정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접근법은 마르크스가 차액지대 I형태에서 발전시킨 논리를 따라간다(MEW 25: 662~685). 차액지대 I형태는 차별적인 비옥도를 갖는 같은 면적의 여러 다른 토지에 투하된 같은 양의 자본이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낳는 경우에 발생한다(MEW 25: 662).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예로서 마르크스는 폭포에 인접하여 폭포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처럼 농업자본가의 기술혁신으로 쉽게 개선될 수 없는 자연력을 들고 있다(MEW 25: 656). 차액지대 I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특징적인 점은 자연력을 기초로 하는 부(富)가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생산에 통합되는가에 관한 해명이다. 마르크스의 설명은 언뜻 보면 모순적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폭포와 같은 자연력은 지대로 전환될 초과이윤의 자연적 기초일 뿐이고 지대의 원천은 잉여가치라는 설명(MEW 25: 659), 곧 차액지대 I형태 역시 토지의 독점적 소유로 인해 잉여가치가 지대로 전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이러한 잉여가치는 다른 토지나 다른 부문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를 가로챌 것이 아니라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자연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가지 설명은 세 번째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데, 곧 농업생산물의 생산가격은 평균 생산가격이 아니라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의 생산가격에 의해 정해진다는 설명(MEW 25: 674)이 차액지대 I형태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의 핵심이다. 최열등지의 농업자본가도 투하자본량에 따른 사회적 평균이윤을 얻기 때문에 최열등지의 농업생산물의 생산가격이 농업생산물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최열등지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로 지불할 초과이윤이 생산되지 않지만 자연력의 기여로 비옥도가 이 보다 높은 토지에서는 자연력의 기여 정도에 따라 상이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며 토지소유자는 초과이윤을 지대로 전유한다. 차액지대

란 최열등지의 생산성과 비옥도 높은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초과이윤인데, 여기에서 생산성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기술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자연조건의 차이이다. 이를 공장생산에서는 사회적 평균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반면에 농업생산에서는 최하의 한계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다. 농업생산물의 사회적 가치는 평균기술 수준을 전제하며 종자개량이나 영농기법 혁신 등으로 특별잉여가치 생산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마르크스가 부각시킨 문제는 이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농업자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가치법칙과 이윤율 균등화가 그대로 관철되더라도 자연적 생산조건의 차이는 여전히 남으며 이로부터 차액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최악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개별 가치가 시장가격이 되므로 최악의 자연조건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연조건에서 생산하는 농업자본은 차액지대만큼을 더 많이 생산한 결과로 나타난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조건의 격차에 의한 초과이윤은 기술혁신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되기 어려운 고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액지대 I형태는 특별잉여가치와 다르다. 특별잉여가치는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개별자본가 간의 경쟁과 기술의 확산에 의해 소멸되고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자연조건은 쉽게 복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초과이윤은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차액지대 I형태를 낳는다.

전체적으로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농업자본가에게 평균이윤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안겨주는 자연력의 생산적 기능이다. 마르크스는 차액지대론이 자신의 가치론과 잉여가치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농업생산물의 생산가격 결정에 관해 해명한다. 둘째, 토지소유는 자연력의 독점을 뜻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농업자본가에게 분배되는 평균이윤을 초과하는 몫을 차액지대로서 전유한다. 마르크스는 차액지대를 “허위의 사회적 가치”(MEW 25: 673)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연력의 생산적 기여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와 토지생산물의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거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차액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연합체로 대체되면 농업생산물에서 차액지대가 소멸하며 그 만큼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한다(MEW 25: 673~674). 하지만 이는 거꾸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차액지대가 가치형성과정에 참여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차액지대는 “생산부문의 잉여가치가 이전되는 것”(하태규, 2015)이 아니라 농업부문 안에서 생산된 것이다(안현효, 2016: 84). ‘허위의 사회적 가치’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의 범주들의 상호관계의 이해에서, 특히 이윤과 지대의 관계와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잉여가치학설사』 2권에서 마르크스는 토지가 민중소유(Volkseigentum)로 전환되면 차액지대를 포함한 지대 전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한다(MEW 26.2: 97~100). 여기에서 하나의 사고실험을 진행해보자. 만약 토지소유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로 바뀌더라도 토지의 사용은 공동체적 단위가 아니라 사적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사적인 농업자본가가 토지의 공동소유자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한다고 가정해보자.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에 의하여 자연조건의 차이가 균등화될까? 토지사용의 차원에서 사적 분할이 있는 한에서 자연조건의 차이는 결코 균등화되지 않는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임대한 사람의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은 더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액지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자인 개별적 사회구성원 모두는 지대에 해당하는 초과이윤을 임대료로 받고 이를 평등하게 나누게 될 것이다.⁷⁾ 이와 같은 사고실험은 지대란 이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잉여가치임을 알려준다.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지대를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배당한다고 해도 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배당이 과세와 이전의 연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차액지대에 대한 과세는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다.

강남훈(2004)과 안현효(2012; 2013)는 차액지대 I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정보지대에 적용하여 노동도 자본도 아닌 제3의 무엇에 의해 정보지대가 유래한다고 설명한다. 제3의 무엇은 지식과 네트워크 외부성이다. 나아가 안현효(2016)는 차액지대 I형태에 의지하여 인지자본주의론을 비판하며 이를 인지지대로 확장한다. 아울러 곽노완(2017a)의 도시지대론도 차액지대 I형태와 같

7) 이러한 모델은 토지의 공동소유와 사적 이용을 임대료 배당으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모델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최초로 제창한 토마스 스펜스의 『유아의 권리』(*The Rights of Infants*)에서 처음 제안되었다(Spence, 1982[1797]).

은 토지에 차례로 투하된 같은 자본량들이 다른 생산성을 낳는 차액지대 II형태의 동태적 조합으로부터 출발점을 얻는다. 안현효(2016)의 작업은 차액지대론을 지식과 네트워크 외부성에 적용했지만 플랫폼자본주의의 빅데이터 기반 가치생산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 기반 가치생산도 넓은 의미의 인지 지대로 볼 수 있겠지만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빅데이터 형성,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이라는 특징적인 가치화 과정은 별도의 분석을 요한다. 여기에서 이를 개략적으로 진행해 보자. 차액지대 I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자연적 부(富)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치화되어 초과이윤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를 인공적 부(富)인 빅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플랫폼 자본의 이윤은 복합적이다. 거기에는 기업의 고정자본인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로 얻는 특별잉여가치도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독점이윤도 들어간다. 하지만 특별잉여가치나 독점이윤은 데이터 추출기구로서 플랫폼의 매우 특별한 기능을 전제한다. 따라서 플랫폼과 데이터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본은 개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별 데이터들은 재산권의 대상으로 사고 팔릴 수 없으며 오직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 있는 인격권의 대상일 뿐이다. 자본은 오직 플랫폼만을 소유하며 데이터들은 플랫폼에 의해 수집되고 이를 통해 자본은 데이터를 활용할 실효적 지배력을 획득한다(금민, 2020: 166~169). 토지소유권은 차액지대 전유의 근거인데, 이와 유사한 것은 플랫폼 소유권이 데이터 소유권이 아니다. 데이터가 가치원천이지만 플랫폼 자본의 소유대상은 아니다. 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플랫폼 소유자는 마치 폭포의 자연력을 토지 소유자가 지배하듯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다.

플랫폼 경제는 승자독식 경제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플랫폼 자본의 데이터 지배력은 자본 간 경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다. 즉 차액지대 I형태에서 말하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자연조건의 차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플랫폼 밖에서의 부수적 거래는 더 많은 거래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초과이윤 획득은 더욱 확고하게 고정된다. 이와 같은 점은 플랫폼 소유권을 차액지대를 획득하는 토지

소유권과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초과이익은 단지 독점이윤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생산적 기능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 예측성의 제고, 생산성의 제고 등 생산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차액지대 I형태의 핵심 요소인 자연력의 생산적 기여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차액지대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있다. 사회적 가치가 가장 열악한 자연조건에서 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지대 I형태와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생산에서 사회적 가치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최신의 생산기술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 때문에 빅데이터에 의한 가치생산 일체를 특별잉여가치 생산으로 본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도외시한다는 더 큰 문제점을 낳는다. 두 번째 난점은 자연적 부와 인공적 부의 발생적 차이에 기인하는 난점이다. 빅데이터 기반 가치생산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인공적 부가 가치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어야 한다. 빅데이터는 자연적 부인 토지처럼 가치화 과정 이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데이터는 디지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물이다. 디지털 활동이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하여 기록되고, 다시 말하자면 수집 또는 인클로저 되고, 활용되어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가치화 될 때에만 디지털 활동은 비로소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이 된다. 이 말은 생산적 기여의 포커스는 디지털 활동이나 개별 데이터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맞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빅데이터라는 인공적 부를 생산하는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가치화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며, 이러한 전체 과정의 출발점은 플랫폼에 의한 개별 데이터의 인클로저로부터 출발한다. 차액지대론은 가치화의 출발점으로서 데이터 인클로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는 마르크스의 원시적 축적 개념의 확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 원시적 축적은 플랫폼 소유권이라는 확고한 소유권적 기초에서 출발하며, 데이터의 포획, 빅데이터의 형성, 알고리즘의 진화는 차례로 진행되지만 동시에 진행되며 이 과정 전체는 반복된다. 인공적 공통부를 성립시키지만 동시에 잉여가치생산으로 내부화하는 이 과정은 단 한 번에 끝나는 역사적 출발점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 안에서 반복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된다.⁸⁾ 빅데이터

에 의한 가치창출과 인클로저의 결합은 원시적 축적 개념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항상적 과정으로서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가치화 과정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금민, 2020: 166). 빅데이터에 의한 가치생산은 플랫폼에 의한 윌타리치기만이 아니라 가치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2)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패러다임의 문제점과 빅데이터 공동부 패러다임의 장점

앞에서 전개한 가치화 과정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재정리해 보자. 여기에서 ‘노동’이 개별적 노동을 의미하든 혹은 사회적 노동을 의미하든 데이터의 사회적 존재형태를 간과하고 데이터를 디지털 활동 그 자체와 혼동한다.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은 기본소득을 보상체제로 언급하지만(Hardt and Negri, 2001: 403; 이항우, 2017), 개별적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마이크로페이먼트(micropayment)를 보상체제로 제시한다. 개별적 노동으로서 데이터 개념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의해 제안되었다. 글렌 웨일(Glen Weyl)과 동료들은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의 고정자본으로 소유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데이터를 노동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별 노동에 보상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Arrieta Ibarra et al., 2017). 두 경우 모두 디지털 기록물이라는 데이터의 존재형식을 간과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가 창출한 가치의 원천은 디지털 기록물로서의 데이터이지 이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기록물로서 남기는 개인들의 디지털 활동이 아니다. 디지털 활동이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는 유튜버들처럼 개인들의 디지털 활동이 콘텐츠로서 가치화되는 경우일 뿐이다. 반면에 디지털 기록물을 빅데이터로 형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나오는 수익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조건 없이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패러다임 대신에 ‘사회공동자산 또는

- 8) 원시적 축적이 일회적이지 않으며 사회재생산에서 반복된다는 인식은 이미 알튀세르와 발리바르(Louis Althusser and Étienne Balibar, 1972: 370~380) 및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und Guattari, 1992: 620~621)에서도 나타난다.

공통부로서의 빅데이터' 패러다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공통부로서의 빅데이터 패러다임은 위에서 전개한 가치화 분석으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인공적 공통부로서 플랫폼 자본 없이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가치화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다. 이제 빅데이터 배당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개념적 윤곽을 부여하도록 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개간된 농지에 비유해 보자. 원래 존재했던 토지와 개간된 농지의 개념적 구별이 이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즉 원천 데이터는 대지 그 자체에 비유할 수 있다면 빅데이터는 개간된 농지라고 비유할 수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빅데이터 형성도 토지 개간과 비슷한 가치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개간이 개시되기 이전의 황무지는 가치를 전혀 가지지 않지만 개간과 더불어 가치대상이 된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동시에 탄생시키는 가치화 과정에 의해 애초에는 가치대상이 아니었던 원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변화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는 가치대상이 되며 비로소 몫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을 얻게 된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가치화 과정 이전의 개별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대상일 수 없다. 플랫폼 자본에 의해 개별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가치화되기 이전의 개별 데이터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가치화 과정은 빅데이터 역시 가치대상으로 만들며 이와 함께 빅데이터의 원천인 디지털 활동을 제공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권은 개별적 데이터 소유권의 집합이 아니며 플랫폼에 의한 빅데이터의 형성과 함께 새로 탄생한 권리이다.

3) 플랫폼 자본은 기생적인가 생산적인가?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적 형태의 고정자본이 아니다.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술적 조건이자 데이터 경제의 자본주의적 조직 형태이다. 데이터의 집적이야말로 플랫폼 경제의 목표이며, 플랫폼 기업에게 가장 핵심적인 자원도 데이터이다. 기업의 소유대상인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 추출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디지털 인프라이며 더 많은 데이터의

집적은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키며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데이터 집적으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포획장치로서 플랫폼은 반드시 기업 소유이어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의 전제조건인 디지털 플랫폼은 기업의 고정자본으로서 사유재산권에 의해 보호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로로서의 플랫폼, 저장소로서의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플랫폼 알고리즘,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의 전 과정에서 플랫폼은 데이터를 소유관계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인클로저하고 플랫폼을 소유함으로써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가치화의 기구로서 플랫폼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은 자본이 오직 플랫폼만을 소유한 채 나머지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하며 이윤은 외부효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플랫폼의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지만, 앞서 서술한 공통부의 가치화라는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면 플랫폼 경제를 일종의 수탈경제, 나쁘게 말하자면 “불로소득 자본주의”나 “기생경제”로 간주하게 된다(Standing, 2016: Chap. 6). 기생경제의 크기가 증대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배달 증개앱과 같은 린 플랫폼(lean platform)으로 인하여 증폭되고 있으며 오늘날 플랫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플랫폼(advertising platform)의 이윤 중에서 광고수익만 놓고 생각하면 플랫폼 자본의 이윤이 생산 기업이 만든 잉여가치의 재분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자본이 기생적인가 생산적인가의 문제는 플랫폼 자본이 이윤생산에 기여하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이란 전체 자본의 이윤생산에 대한 기여를 뜻하며 반대로 기생성이란 개별 자본의 이윤생산에는 기여하지만 총자본의 이윤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개별 기업의 시장가치나 경쟁의 관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데이터 주도 혁신은 생산적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자본의 생산기간, 유통기간, 재투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이윤생산에 기여한다. 데이터 주도 혁신은 자본의 회전기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시간단축의 효과를 낳고 회전기간의 단축은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구글 및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광고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기초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를 싣는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기간 단축에 기여한다. 지멘스나 GE와 같은 산업 플랫폼은 제조업의 가동중단을 줄이고 불필요한 과잉설비를 줄여준다(Srnicke, 2017a: 64~70).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재투자기간의 단축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성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고정자본은 장기간의 갱신주기를 가지는 반면에, 플랫폼 알고리즘은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의하여 항상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플랫폼 고정자본에는 재투자 지체가 거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Daum, 2017: 226~227). 전통제조업까지 확산된 데이터 주도 혁신은 제조업의 고정자본 갱신주기를 줄인다. 전통적 고정자본은 내구성이 높고 갱신주기가 길어 과거의 제조업은 미래의 재투자를 위해 큰 규모의 유희화폐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유희화폐자본은 금융시스템으로 흘러들어 가서 신용의 객관적 기초를 형성한다. 금융권에 흘러간 유희화폐자본은 개별자본이 막대한 고정자본 투하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자본의 회전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금융권에만 머물러 재투자 지체를 일으키기도 한다(Barba and de Vivo, 2012; Foley, 1982).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큰 변화가 발생한다.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은 매 순간 업그레이드된다. 이에 발맞추어 제조와 사무자동화를 위한 콘텐츠 알고리즘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조업의 ICT 고정자본 투자가 증대하면 유희화폐자본이 금융권으로부터 이탈하여 스마트 제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데이터 기반 혁신은 생산기간, 유통기간, 재투자 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자본의 회전수를 늘리고 이윤생산에 기여한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성장의 늪에 빠졌음에도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수익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주도 혁신 때문이다.

물론 데이터 주도 혁신이 자본의 생산성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플랫폼 자본의 기생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다. 디지털 전환은 노

동시장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신자유주의 이래로의 지속적인 경향인 고용양극화 가설조차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간숙련 고용의 공동화를 넘어 전반적인 저임금 저숙련화가 추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1999년 이전에는 기술혁신이 중간숙련 직업을 줄이고 대신에 고숙련 및 저숙련 직업만 늘어나서 신규고용은 중간층이 공동화된 U자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났다(Autor, Levy and Murnane, 2003). 하지만 2000년을 지나면서 이 가설이 더 이상 현실에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경험연구들은 전체 고용에서 저숙련 비중이 폭증하며 중간숙련과 고숙련 비중은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Autor and Dorn, 2013). 즉 U자형 그래프가 L자 형 그래프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자리 여부와 관계없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4. 글을 맺으며

위에서는 기본소득론과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의 만남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 및 새로운 모색의 가능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따져보았다. 하지만 위의 논의는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을 지나치게 정치경제학 비판과 대안사회상으로만 좁혀놓은 결과가 되었다. 정치가 또는 정치철학자 마르크스와 기본소득론이 어떻게 접속될 수 있는가는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초기 마르크스가 전개했던 계급정치론, 『자본』의 마르크스가 채택한 자본주의에 대한 서술적 비판의 프로그램과 경제적 범주로서의 계급, 또는 계급정치학을 넘어 보편성의 정치론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론이 만나게 될 정치철학적 지점과의 교차점을 그려보는 작업은 분명 유의미한 일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샹탈 무프(Mouffe, 2000: 125)가 사회민주주의 이후의 시대에 신자유주의로의 투항이나 케인즈주의로의 귀환을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좌파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그 세 가지는 1)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의 재분배, 2) 혼합경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비영리 활동의 고무, 3)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그렇다면 무프의 제안에서 전통적인 노동자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노동성과에 따른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먼

저 ‘모두의 몫이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2020년 8월 29일 투고, 8월 31일 심사, 9월 3일 게재 확정)

□ 참고문헌

- 강남훈. 2004. 「정보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 《진보평론》, 제21호, 239~248쪽.
- 곽노완. 2007.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제18권 제2호, 183~218쪽.
- _____. 2010.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시대와 철학》, 제21권 제3호, 149~179쪽.
- _____. 2011.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제2호, 40~68쪽.
- _____. 2017a. 「마르크스 지대론의 확장과 현대 도시지대론을 위한 시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3권, 35~63쪽.
- _____. 2017b. 「사회주의와 기본소득—로머의 사회배당 및 하위드의 기본소득 개념의 재구성」.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3호, 122~143쪽.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출판사.
- 안현호. 2012.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4호, 42~67쪽.
- _____. 2013. 「정보지대와 노동가치론. 전희상의 논평에 대한 답변」.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4호, 168~190쪽.
- _____. 2016.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2호, 68~91쪽.
- 이항우. 2014. 「정동 경제의 가치 논리와 빅데이터 폴리네이션」. 《경제와 사회》, 제104호, 142~172쪽.
- _____. 2017.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독점 지대, 4차 산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한울아카데미.
- 하태규. 2015. 「마르크스 지대론의 전개」. 《사회경제평론》, 제48권 제3호, 35~71쪽.
- Althusser, Louis und Étienne Balibar. 1972. *Das Kapital lesen*. Bd. 2. Reinbek.
- Arrieta Ibarra, Imanol and Goff, Leonard and Jiménez Hernández, Diego and Lanier, Jaron and Weyl, Eric Glen. 2017. “Should We Treat Data as Labor? Moving Beyond ‘Free’ (December 27).”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apers & Proceedings*, Vol. 1, No. 1. Forthcoming.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093683>.
- Autor, D. and D. Dorn. 2013,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3, No. 5. pp. 1553-1597.

- Autor, D. H., F. Levy and R. J. Murnane.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pp. 1279-1333.
- Backhaus, Hans-Georg. 1997. *Dialektik der Wertform: Untersuchungen zur Marxschen Ökonomiekritik*. Freiburg im Breisgau: Ça ira Verlag.
- Barba, Aldo and Giancarlo de Vivo. 2012. "An 'Unproductive Labour' View of Fi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6, No. 6, pp. 1479-1496.
- Bastani, Aaron. 2019. *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 London: Verso.
- Bakhshi, H., Bravo-Biosca, A. and J. Mateos-Garcia, 2014. "Inside the Datavores: Estimating the Effect of Data and Online Analytics on Firm Performance". *Nesta*, March, www.nesta.org.uk/sites/default/files/inside_the_datavores_technical_report.pdf.
- Beveridge, William. 1942. *Beveridge Report: Case for the Retention of Approved Societies*. National Conference of Industrial Assurance Approved Societies: McCorquodale & Company Limited.
- Brynjolfsson, E., L. M. Hitt and H.H. Kim. 2011, "Strength in Numbers: How Does Data-Driven Decisionmaking Affect Firm Performance?".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819486.
- Carrascal, Juan Pablo and Christopher Riederer, Vijay Erramilli, Mauro Cherubini, Rodrigo de Oliveira. 2013. "Your browsing behavior for a Big Mac: Economics of Personal Information Online." http://jpcarrascal.com/docs/publications/WWW2013-Browsing_behavior_big_mac.pdf.
- Cohen, M. and Nagel, Th., Scanlon Th. 1980. Hg.: *Marx, Justice and History*. Princeton.
- Daum, Timo. 2017. *Das Kapital sind wir: zur Kritik der digitalen Ökonomie*. Hamburg: Nautilus.
- _____. 2018. *Die künstliche Intelligenz des Kapitals*. Hamburg: Nautilus.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1992. *Tausend Plateaus: Kapitalismus und Schizophrenie*. Merve-Verlag. 1992.
- Dworkin, Ronald. 2000. *Sovereign Virtue*. Boston: Harvard UP.
- Engster, Frank and Anderea Schröder. 2014. "Maß und Messung." *Zeitschrift für kritische Sozialtheorie und Philosophie*. Bd. 1 Heft 1, 109-147.
- _____. 2020. "Alfred Sohn-Rethels große Idee und ihr Problem. Das Maß als blinder Fleck der Kapitalismuskritik." In *Alfred Sohn-Rethel (1899-1990). Controverses autour d'un philosophe matérialiste*. pp. 157-176. Available at: <https://journals.openedition.org/rg/4016>.
- Engster, Frank and Oliver Schlaudt. 2018. "Alfred Sohn-Rethel: Real Abstraction and the Unity of Commodity-Form and Thought Form." in Beverley Best, Werner Bonefeld,

- Neil Larsen, Chris O’Kane (eds.). *Handbook of Frankfurt School Critical Theory*, Vol. I. London: SAGE, pp. 284-301.
- Engster, Frank. 2014. *Das Geld als Maß, Mittel und Methode: Das Rechnen mit der Identität der Zeit*. Berlin: Neofelis Verlag.
- Foley, Duncan K. 1982. “Realization and Accumulation in Marxian Model of the Circuit of Capital.”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8, No. 2, pp. 300-319.
- Fuchs, Christian. 2019. “Karl Marx in the Age of Big Data Capitalism.” In Chandler, David and Christian Fuchs (eds.). *Digital Objects, Digital Subject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apitalism, Labour and Politics in the Age of Big Data*. 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pp. 53-71. <https://www.jstor.org/stable/j.ctvckq9qb.6>.
- Hanloser, Gerhard and Karl Reitter. 2008. *Der bewegte Marx. Eine einführende Kritik des Zirkulationsmarxismus*. Münster: Unrast.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1. *Empire*.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ultitude*. London: Penguin.
- Haskel, Jonathan and Stian Westlake. 2017. *Capitalism without Capital -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inrich, Michael. 1991. *Die Wissenschaft vom Wert. Die Marxsche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zwischen wissenschaftlicher Revolution und klassischer Tradition*. Hamburg: VSA-Verlag.
- Howard, M. W. 2005a. “Basic Income, Liberal Neutrality, Socialism, and Work.” In Widerquist, Karl, Michael Anthony Lewis and Steven Pressman (eds.).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London: Routledge.
- _____. 2005b. “Liberal and Marxist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In G. Standing (ed.). *Promoting Income Security as a Right: Europe and North America*. London: Anthem Press.
- Lansley, Stewart and Duncan McCann. 2019. “Citizen’s wealth funds, a citizen’s dividend and basic income.” *Renewal: a Journal of Labour Politics*, pp. 72-83.
- Lansley, Stewart, Duncan McCann, and Steve Schifferes. 2018. *Remodelling Capitalism: How social wealth funds could transform Britain*. Friends Provident Foundation, <https://www.friendsprovident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18/05/covers-Remodelling-Capitalism-Report.pdf>.
- Lazzarato, Maurizio. 2014. *Signs and machines: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CA: Semiotext(e).
- Marx, Karl. 1875.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In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Werke (MEW) Bd. 19*. Berlin: Karl Dietz Verlag.
- _____. 1964[1894].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Dritter Band. In: Marx,

- Karl and Friedrich Engels: Werke (MEW). Band 25. Berlin: Dietz.
- _____. 1983[1857-1858]. “Maschinenfragment. Fixes Kapitel und Entwicklung der produktivkräfte der Gesellschaft.” In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Werke* (MEW). Bd. 42. 590-609.
- _____. 1984[1864].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rster Band. In: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Werke (MEW). Band 23. Berlin: Dietz.
- _____. 2000[1863]. *Theorien über den Mehrwert*. Zweiter Teil. In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Werke* (MEW). Band 26.2.
- Mason, P. 2015. *Postcapitalism: A guide to our future*. London: Allen Lane.
- Meade, James. 1989. *Agatoptopia: The Economics of Partnership*. London: Pergamon and Abreden University Press.
- Mouffe, Chantal.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and New York: Verso.
- OECD. 2014. *Data-driven Innovation for Growth and Well-being*. Interim Synthesis Report. <https://www.oecd.org/sti/inno/data-driven-innovation-interim-synthesis.pdf>.
- Pasquinelli, M. 2008. *Animal Spirits: A Bestiary of the Commons*. NAI Press.
- Pitts, F. H. 2018a. “A crisis of measurability? Critiquing post-operaismo on labour, value and the basic income.” *Capital and Class*, Vol. 42, No. 1, pp. 3-21. DOI: 10.1177/0309816816665579.
- _____. 2018b. “Beyond the Fragment: postoperaismo, postcapitalism and Marx’s ‘Notes on machines’, 45 years on.” *Economy and Society*, Vol. 46, No. (3-4), pp. 324-345. DOI: 10.1080/03085147.2017.1397360.
- Postone, Moishe. 1993.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tter, Karl (ed.). 2015. *Philosoph der Befreiung oder Theoretiker des Kapitals? Zur Kritik der »neuen Marx-Lektüre«*. Mit Beiträgen von Jürgen Albohn, Johann-Friedrich Anders, Roland Atzmüller, Tobias Brugger, Andreas Exner, Christoph Henning, John Holloway, Georg Klauda, Christoph Lieber, Fritz Reheis, Karl Reitter. Wien: Mandelbaum Verlag.
- Rochet, Jean-Charles and Jean Tirole. 2006. “Two-Sided Markets: A Progress Report”.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7, No. 3. pp. 645-667.
- Sohn-Rethel, Alfred. 1978. *Warenform und Denkform. Mit zwei Anhängen [incl.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 Spence, Thomas. 1982[1797]. *The Rights of Infants*. In Dickinson, H. T.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Newcastle upon Tyne: Averro Publications LTD.
- Srnicek, Nick and Alex Williams. 2016. *Inventing the Future: Postcapitalism and a World Without Work*. London: Verso.

- Srnicek, Nick. 2017a. *Platform Capitalism*. Cambridge: Polity Books.
- _____. 2017b. "The challenges of platform capitalism: Understanding the logic of a new business model." *Juncture*, Vol. 23, No. 4, pp. 254-257.
- Standing, Guy. 2016.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London: Biteback Publishing.
- Van der Veen R. J. and Ph. V. Parijs. 198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 Society*, Vol. 15, No. 5, pp. 635-655. Reprinted: *Basic Income Studies*, Vol. 1. Issue 1. June 2006.
- Van Parijs, Ph. 2008.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 (Boston, March 9).
- Vercellone, Carlo. 2007. "From Formal Subsumption to General Intellect: Elements for Marxist Reading of Thesis of Cognitive Capitalism." *Historical Materialism*, Vol. 15, pp. 13-36.
- _____. 2010. "The Crisis of Law of Value and the Becoming Rent of Profit." In A. S. M. Fumagalli (ed.). *Crisis in the Global Economy: Financial Markets, Social Struggles, and New Political Scenarios*. L.A.: Semiotext(e).
- Virno, Paolo. 2007. "General Intellect." *Historical Materialism*, Vol. 15, pp. 3-8.
- Williams, Alex and Nick Srnicek. 2013. "#ACCELERATE 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 In *Critical Legal Thinking*. 14 May.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13/05/14/accelerate-manifesto-for-an-accelerationist-politics/>

□ 영문초록

Platform Capitalism and Basic Income: Beyond the Pros and Cons of Basic Income in the Marxist Debate

Min Keum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I) signifies the appearance of a new distribution principle qualitatively distinguished from the current principle of income distribution which is established on property ownership and labor performance. However, the effect of BI cannot be reduced merely to that in the narrow dimension of income distribution. It will lead to a total redistribution of property and restructuring of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other words, a new economy or redistribution of social time. Such a profound change is possible only under a certain condition, and the contemporary crisis of capitalism is that very condition. Herein lies the intersection of Marx's intellectual legacy and BI. Nevertheless, the encounter of these two positions has been rarely productive for either, so far. There have been three memorable attempts among the few but these are rather limited: one to reduce Marx's spare remarks on higher period of communism to the justice theory of distribution, another to derive the *raison d'être* of BI from the impossibility of the quantification of work-time and value, and the other to ground BI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critique by focussing on the concept of expropriation. In this paper, instead, I pay attention to the internalizing process of the *production of wealth*, which is exterior to the categorie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as the *production of value*. I argue that the *data-based value creation* is not an expropriation, or distribution of the already created surplus, but a valorization, by the platform capital, of the *digital commons*.

Keywords: platform capitalism, basic income, Marx, data based value creation, valorization of digital commons